4면에서 계속 ➞

대학이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장기적으로 등록금 외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추후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정원 외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원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등록금 외 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기부금 모금과 공간 대여, 적립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제 교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기부금 수입은 ▲2024학년도 약 121억 원 ▲2025학년도 약 151억 원 ▲2026학년도 약 188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실제 기부금 결산액은 ▲2024학년도 약 116억 원 ▲2025학년도 약 111억 원으로, 모두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 기부금 확대가 등록금 외 재원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실제 모금 실적도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는 단기적인 등록금 수입 확대를 장기적인 재원 다각화의 기반으로 보고 있지만, 총학은 등록금 외 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 부담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등록금 대원칙' 수립 학교-총학 온도 차

지난 4월 필요성이 제기되고 9월 논의가 예고됐던 등록금 대원칙은 11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교는 재원 배분을 사전에 고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학은 대원칙 마련에 앞서 지속적인 재정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지난 6월 8일 보도에서 총학 출범 직후 등록금 논의가 집중돼 대학 재정 자료를 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당시 신 회장은 "총학생회 임기가 시작되는 1월에 학교와 곧바로 등록금 협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구조상 대응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김진상 총장은 지난 4월 학생과 교원,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등록금 관련 대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9월경 대원칙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제안됐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신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학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대원칙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팀장은 "우리학교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대학의 운영 방향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며 "미리 대원칙을 정해 수입 재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재원 배분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대원칙 구상을 등록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경영 방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은 사전에 재원 배분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총학이 강조하는 것은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 구조다. 신 회장은 "대원칙 마련에 앞서 학교와 학생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의 장이 구축돼야 대원칙도 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심위 구성 개편 추진 협상 전문성 강화 모색

등심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총학은 대학 재정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양캠 총학은 지난 6월 예고한 등록금 협상 대응 TF를 구성해 세 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차기 등록금 인상률 전망과 캠퍼스별 협상 전략, 등심위 위원 구성 개편 등을 논의했다.

국제캠 총학은 현행 학부생 2명·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등심위 학생위원을 학부생 3명·대학원생 1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부와 대학원의 재학생 규모와 등록금 부담, 교육과정상 이해관계 차이 등을 고려해 학부생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예산팀과 면담해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전달했다"며 한편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이나 규정 개정 일정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교의 공식적인 수용 여부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TF에서는 학교 측 등심위 위원을 기획조정처장과 총무관리처장 등 재정·시설 관련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제캠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신 회장은 "기존 위원 구성의 취지를 먼저 검토해 신중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질적인 재정 논의를 위해 관련 부서 책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해당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등심위 회의 횟수나 자료 제공 시기 자체보다 학생위원들이 대학 회계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협의 정례화 미완 학생 요구 이행 여부가 과제

학교와 학생 대표 간 등록금 협의는 여러 차례 진행돼 왔으며, 실제 인상률 조정도 이뤄졌다. 총학이 추진하는 다음 변화는 이러한 협의를 등록금 책정 시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학기 중 재정운용 논의로 이어가는 것이다.

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앞서 양캠 총학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면 회의 8차례가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양캠 확대운영위원회 대상 재정 설명회와 후속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학교가 당초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3.1%였으나, 학생 대표들의 3% 미만 조정 요구 등을 거쳐 최종 2.95%로 결정됐다.

신 회장은 앞서 구성한 공동 TF의 협상 자료와 논의 내용을 차기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회 교체에 따른 협상 준비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6월 보도에서 총학이 7월 학무부총장 협의체, 8월 재정운용 설명회, 10월 추가경정예산 반영 점검, 11월 집행 결과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협상 이후에도 학생 요구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8월 13일 열린 재정 분야 학무부총장 협의체에서는 학생 요구사항 16건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학교 측이 수용했으며 ▲오비스홀 강의실 책상·의자 교체 ▲약학대학 진입 계단 구조 개선 ▲정경대학 1층 휴게실 및 열람실 개선 예산 추가 경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추진 등 4건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 점검 일정도 당초 총학이 제시한 계획과 차이가 있었다. 7월 중 추진한다고 밝힌 학무부총장 협의회는 8월에 개최됐고, 8월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힌 재정운용설명회는 11월 3일 열렸다. 학교는 시설 개선과 교직원 신규 채용 등 주요 투자 현황을 공개했지만, 학생 요구안 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의 절차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